

전북도, 고용쇼크 극복 위한 일자리창출 전력

시군·유관기관·전문가 등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일자리사업 발굴 중점
농생명·신재생·상용차 신산업, 고용의 질 개선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 전력

전북도는 20일 민선 7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 개발과 2019년 정부 공모사업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도내 일자리 관련 지자체 담당자 및 유관기관 워크숍을 가졌다.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워크숍은 전북도

각 시·군 담당자 및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지역 내 고용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최근의 고용쇼크 극복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및 고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민선7기를 맞이해 지역특색 산업 및 지역 현안을 고려한 지역 주

도적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 및 지역 주민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센터장을 초청해 정부의 고용 정책 방향과 지역일자리 대책과 대응 전략과 지역일자리사업의 방향과 과

제 일자리사업 방향성도 토의했다.
전북도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인 농생명·신재생·상용차 신산업 등 전복이 잘 할 수 있는 산업과 연계하여 부문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응하고 임금격차 해소·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제값 받는 농업 실현 위한 농기계 수리 봉사 실시

전북도는 안정적인 영농으로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농기계의 고장을 방지하고 영농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을철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편성 운영 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영농철 농업인들이 농기계 고장 발생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가을철 농기계 순회 봉사를 한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활동은 관리기, 트랙터, 콤팩트, 곡물건조기 등 매년 봄 가을철 영농이전에 농기계 고장 시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다.
가을철 수리봉사에 참여 업체는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아세이텍(주), IS엔트론(주), 신흥기업(주), (유한성)으로 7개 제조업체로 구성되어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기계 수리봉사 활동은 14개 시·군에 7개의 전문 수리기사 10명과 7대의 차량으로 편성 지원 활동을 펼친다.
수리봉사 일정은 각 제조업체별 순회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읍면별 일정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여 수리를 받으면 된다.
수리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건조기, 관리기 등 동력기계와 부속작업기를 포함하며 순회수리봉사가 기간 동안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검·수리를 무료·부품대금 및 운반비 실비 부담으로 실시한다.
또한, 현장에서 간단한 농기계 고장 응급처치 요령과 수리교육 실시 현장 기술 교육을 통해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지도하여 자가 정비 수리 능력도 높일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성금전달식
20일 도청 견진실에서 소외계층 청소년, 장애인 등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행복드림버스 사업을 위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공장장 박종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조합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4,000만원(사회복지시설, 단체 버스임차 및 여행경비 지원)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전북도,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 유관기관 합동 점검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사전제거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4개 분야 집중 단속

전북도는 가을 개학기를 맞이해 도내 초등학교 주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 및 단속은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하며,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차장,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더불어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 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유해환경 정화 분야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불법 간판 광고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 실태에 대

한 점검과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 등을 지도하고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을 단속한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노후 광고물 점검과 정비를 실시한다.
아울러, 예방과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점검 기간 중에 안전문화 운동 확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민들도 스마트폰 앱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며, 학교주변 위해요인 제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靑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제재위반 아니라고 판단”

“연락사무소는 유엔·美제재 위반
근란한 상황 빠질 수도” 국내보도 정면 반박
“대북제재 이유 비핵화 앞당기기 위한 것
사무소, 비핵화 협상 촉진 기여”

청와대는 20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한 보도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북측 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로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총 47개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둘째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셋째 우리 정부 대표

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넷째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내용이 6·12 선포서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내 언론에 소개된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견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 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미국 내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도의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관계자 발로 나왔으니,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기보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인용해 “남북연락사무소가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시스

밝은세상 만드는 숨은영웅 발굴... ‘국민추천포상’ 31일 마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추천 가능한 대상은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힘쓰는 사람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따뜻한 가족에 또는 통합(회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모바일(ms.sanghun.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우편, 팩스(02-2100-3088), 현장방문으로도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과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의 안내를 받아 추천할 수도 있다.
수상자는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수여식을 통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는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